

#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사업 무산”

### 서선희 시의원, 민선 6기 공약사업 비판

전주시가 민선 6기 들어 현안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직자가 아닌 외부인을 대거 끌어들이고 시장 재선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정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주시의회 서선희 의원(서신동)은 18일 제336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민선 6기 3년차로 접어들고 있는 전주시가 시장 임기 중 성과를 내기 위한 조급증에 전주시 예산이 재선을 목표로 한 사업에 집중 배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특히 “전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도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재정 중

양 투자심사 결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건은 재검토 의견으로 회신돼 어렵게 됐다”며 “전북도와 종합경기장 부지 양여조건 등 협의가 필수적인 사업을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 무산은 전주시의 요구에 따라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를 의결해 준 시의회도 집행부와 공동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의회가 전주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체시설 부지매입 예산도 적극 반영해 줬는데도 롯데쇼핑과 법적 다툼의 우려도 없고, 전복도와 협의도 문제가 없었다는 김승



수 시장의 공언과는 달리 사업 추진이 난관에 부딪혀 지난해 세웠던 대체시설 부지매입비 40억 원도 그대로 이월시켜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또 “전주시 2015년도 결산기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하는 재정자주도는 56.31%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계속사업으로 큰 규모의 예산이 이월되면서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이월비에 묶여 세부 세출 구조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서 의원은 “전주시가 다른 지자체에서 성공을 거둔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의 본질에 접근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행정조직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전주시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시민들을 감동시킨 ‘엄마의 밥상’은 성공적으로 정착한 반면, 주요 현안사업에 외부인을 대거 끌어들이는 ‘다올마당’은 전시성 행정은 아닌지 실효성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간 김승수 시장의 행정운영 속도와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많은 증언들이 있지만 민선 6기 시장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침묵해왔다”며 “이제라도 김 시장이 직접 나서 남은 임기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는 산업단지 노후화로 침체일로에 있던 팔복동 노후주거지역 일대에 대한 주민주도형 마을재생사업을 진행한다.

## 전주 팔복동 주민주도형 마을재생사업 청사진 제시

### 시, 팔복새마을 마스터플랜 마련해 사업 본격 추진

산업단지 노후화로 침체일로에 있던 전주시 팔복동 노후주거지역 일대에 대한 주민주도형 마을재생사업 청사진이 제시됐다.

전주시는 생활도로 개설 및 확장, 공동홀 조성, 커뮤니티 공간 조성, 노후 주택정비, 취약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한 팔복새마을 조성사업의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팔복동에 주민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팔복새마을을 사업이 본격화되면 팔복예술공장 조성사업과 철길 명

소화 사업, 금학천 정비사업이 등 팔복동 노후산업단지 일대에서 추진되는 문화공간화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팔복새마을을 사업은 전주시가 지난해 3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프로젝트’ 공모에서 선정됨에 따라, 팔복동 준공업지역 내 노후주거지 밀집지역(A=4만1800㎡)을 대상으로 2018년까지 국비 50억원 등 총 71억원을 투입해 생활인프라 확충, 주거

환경개선, 주민여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선, 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골목길 등 생활도로 4곳을 개설 또는 확장할 계획이다. 또, 기존주택을 리모델링해 순환형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신축 및 리모델링시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홀 도입도 검토하고, 마을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배움터와 청년 레지던시 및 작업장, 소공원, 쉼터 등도 마련된다.

/김영재 기자

### “한옥마을 문제점 해결을”

#### 김윤철 시의원 개선 촉구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은 한옥마을이 직면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윤철 시의원(중앙동·노송동·풍남동)은 18일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전주한옥마을은 전통문화의 재해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게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급격한 상업화 등으로 인한 현실적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옥마을에 삶의 터전을 두고 있는 원주민들의 지지와 협조를 위해서는 그들이 더 이상 떠나지 않도록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며, 상가의 경우에도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정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한옥마을을 재정비하고 관리하는 업무도 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자체 관리 정화하는 시스템으로 과감한 전환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옥마을을 통한 전주시 경제 유발 효과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체류형 관광형태로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는 한옥마을에 상징적 공연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김영재 기자



### “전주·김제 통합 새만금시대 준비”

#### 강동화 시의원 주장

전주시의회에서 전주·김제 통합 추진을 통해 새만금시대를 견인하는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동화 시의원(인후1·2동)은 18일 제336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지역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잠재된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전주시와 김제시의 행정권역 통합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전주시와 김제시의 통합 추진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전주시와 김제시 통합은 새만금 시대를 견인할 중심지역으로 도약의 기회가 되는 동시에 대 중국 허브로 성장해 100만 광역도시로 거듭날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110년 전 군산항 개항 이후 전북지역에 또 하나의 국제 무역항만인 새만금 신항만이 우여곡절 끝에 2011년부터 조성공사에 돌입, 신항만 입지조사 실시 33년 만의 성과로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조성될 새만금 지구의 경쟁력 확충이 기대되고 있다”며 “신항만은 중국과 580km 떨어져 있어 국내 무역항 중에서 중국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 부산항과 광항을 뛰어넘는 무역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5월 국토 해양부는 제



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만금 국제공항을 포함, 국제공항 수요와 입지선정 및 사업 시기 등을 분석하는 타당성 조사가 예정돼 있다”면서 “대상 부지로는 김제시에서 제시한 만경읍 화포리 일대와 군산공항 인근 부지가 검토되고 있어, 전주·김제 통합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또 “지난 9월 한국 고용정보원은 보고서를 통해 ‘초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30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전주시와 김제시의 통합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전주시와 김제시의 통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새만금 국제공항부지 선정에 있어 김제 화포 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현재 김제역에 정착하지 않는 KTX 고속열차를 전북혁신도시 역사 건립을 통해 김제 시민에게도 고속철도 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재 기자

### “롯데백화점 교통광장 불법영업 특혜”

#### 이경신 시의원 의혹 제기

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은 롯데백화점 교통광장 가설시설물에서 이뤄지는 상행위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경신 시의원(터민주 비례대표)은 “롯데백화점 앞 교통광장에서 공공연한 불법영업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전주시는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롯데백화점 불법영업 중단을 위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롯데백화점은 설립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지만 많게는 연간 4천억원 이상, 적게는 2천억원 이상을 판매하는 등 거대 공룡으로 지역 자금을 불태우며 뺏아들이고 있다”며 “막대한 수익은 쟁고도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2360억원 매출대비 복지재단 등에 기부하는 지역 환원금은 기껏 3370만원으로 0.014%에 불과해 그야말



로 ‘겉 값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롯데백화점이 사유지를 버젓이 점령하고, 그 땅에 대형 몽골텐트를 치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전주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상인들이나 유통업체들이 도로를 조금만 점유해도 공무원들이 득달같이 단속하는 현실인데 왜 유독 롯데에만 특혜를 주고 단속의 잣대를 달리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롯데백화점은 6층에 별도의 이벤트 행사를 갖추고도 사유지 교통광장에 대형 몽골텐트를 치고 영업하는 것은 이익이 그만큼 많이 나기 때문 아니겠냐”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c.or.kr \*전자우편 : jvsc@hanmail.net